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고 종 훈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의 지역경쟁력을 다른 국내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비교 평가하여 부산광역시의 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가 21세기의 지역경쟁체제에 등장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부산이 부문별로 적절한 정책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경쟁력을 “지역내 부기기치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지역경쟁력이 지역의 경제력, 지방의 세계화수준, 지역의 금융환경, 지역의 인적자본, 지역의 기술수준,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수준, 주민 삶의 질 등 87개 결정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종합지역경쟁력지수와 8대 부문별 경쟁력결정요인 지표를 도출하고, 또한 이를 이용하여 부산의 구체적인 부문별 경쟁력 강화방안과 이에 걸맞는 부산시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였다.

I. 서 론

1. 연구목적

국외적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가간 경쟁이 기속화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도시·및 지역간 국제경쟁 또한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국제 경쟁에 대한 적극 참여 확대와 지방정부의 자율적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정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가 지역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객관적인 폴드설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지역경쟁력과 관련한 명확한 지표의 설정과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역경쟁력의 지표설정과 개발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의 지역경쟁력을 다른 국내 14개 광역자치단체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비교 평가하여 부산광역시의 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 이 논문은 1997-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의 지역경쟁력지수 계산에 도움을 주신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정진호 박사님과 이경의 논문실사위원께 감사드린다.

부산광역시가 21세기의 지역경쟁체제에 농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부산이 부문별로 적절한 정책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연구범위와 방법

지역경쟁력 평가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환경적 측면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지역의 구성주체(지방정부, 단체, 시민, 기업 등) 가운데 누구를 대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평가관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모든 구성주체를 포함하고, 지역의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물리적 여건과 사회적 환경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도출하여 지역경쟁력 평가에 있어서 특정 항목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의 종합적인 경쟁력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6대 도시와 9개 道를 포함한 15개 광역자치단체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본 연구를 시작할 당시 기준 가장 최근 수집 가능한 통계자료(1997년 12월 발표)가 1996년 기준이었으므로 1996년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로 구성된다. 문헌연구는 기존의 연구문헌 및 통계자료의 분석 겸토로서 지역경쟁력에 관한 기존연구의 정리와 국내 15개 지역의 경쟁력 구성지표의 실태 파악을 포함한다. 실증연구는 부산을 비롯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및 산업구조, 지역개발, 주민의 삶의 질 등 지역사회 전부분에 관한 실태 및 지역격차 파악을 위하여 기존에 주로 사용해온 지역특화계수, 입지상 분석, 지니계수의 추정 등의 방법보다는 최근 경쟁력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KFO분포결합법(Statistical Majorization of the Key Factor for Competitiveness)이라는 다변량 통계분석(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을 이용하였다.

II. 지역경쟁력의 개념

1. 경쟁력개념에 대한 기존연구

경쟁력이란 국가, 지역, 산업, 기업 등 분석대상 단위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될 수 있으며 실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으나 통일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필요한 지역경쟁력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경쟁력 개념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쟁력에 관한 기존연구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경쟁력에 관한 고전이론, 둘째, M. Porter의 국가경쟁력개념과 이를 확장해석 조는 변형한 국가경쟁력의 개념, 셋째, 도시경쟁력 조는 지역경쟁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먼저 국가경쟁력에 관한 고전이론을 살펴보면, 기존이론들은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국가간의 경쟁력 또는 국제경쟁력(international competitiveness)을 주로 다루었는데, 국제경쟁력을 국가간의 교역, 즉 국제무역에 있어서 특정상품이 해외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국가간 생산비용의 절대격차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설명하는 A. Smith 의 절대우위이론, 국가간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가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설명하는 D. Ricardo 의 비교우위이론, 생산요소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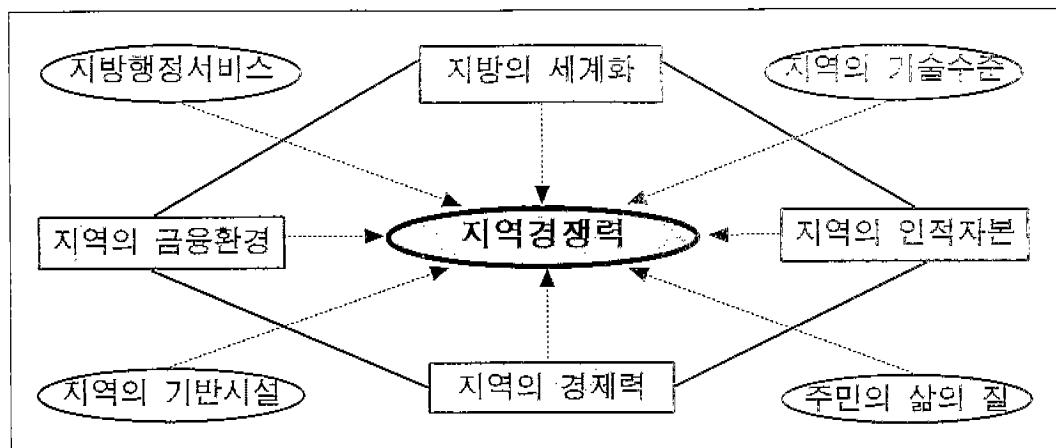
존량의 차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설명하는 Heckscher-Ohlin定理, 국내수요의 크기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설명하는 Linder의 대표수요이론, 신규상품의 개발과 소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격차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설명하는 Gruber와 Vernon의 기술격차이론, 제품의 수령주기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설명하는 Vernon과 Wells의 제품수명주기이론 등이 있다.

둘째, Porter(1990)는 「국가의 경쟁우위론(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에서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Diamond모형”을 정립하였다. Porter에 의하면 국가경쟁력이란 한 마디로 생산성(productivity)의 우위라고 한다. 즉 국가의 주요목표는 국민에게 지속적인 양질의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한다.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Porter의 Diamond모형에는 6가지 주요 결정요소가 있다. 즉 ① 특정산업에서 경쟁에 필요한 기술인력, 토지, 천연자원, 자본, 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부족상태에 관한 요소조건, ②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소비자의 기호에 관한 수요조건, ③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료 또는 중간재의 제공 및 관련산업의 존재여부에 관한 연관산업 및 지원산업 ④ 기업들이 어떻게 창업되고 조직되며 경영되는가 그리고 국내 경쟁관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관한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관계, ⑤ 순수한 발달, 초기적인 기술혁신, 환율급변, 석유파동, 전쟁 등 우연한 사건들을 포함하는 순수기회, ⑥ 자정정책, 금융정책, 교육정책 등을 통해 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산업 및 지원산업, 기업전략·구조 및 경쟁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역할이 그것이다.

조동성(1994, 1995)은 Porter의 Diamond모형에 기업가, 전문경영자와 기술자의 역할을 포함하여 “9-factor model”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Porter의 Diamond모형에 비하면 국가경제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국제경쟁력의 주체가 바뀌어 가는 현상을 출렁하는 동태(dynamic) 모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 도시경쟁력 또는 지역경쟁력의 개념에 관한 기준연구를 살펴보면, 그 정의는 다양하다. 한국경제연구원(1995)의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형 지방경영」에 의하면 지방경쟁력을 “한 지역의 정부, 기업 및 주민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동태적 역량의 내부흐름과 외연능력에 관한 상대적 비교”라고 정의하였으며, 삼성경제연구원(1997)의 「서울·세종시 경쟁력 비교」에 의하면 도시경쟁력을 “도시의 경제여건을 기반으로 주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인간개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타 도시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토개발연구원(1997)의 「지방 대도시 경쟁력 강화방안」에 의하면 도시경쟁력을 “장기적 생산성 증가를 가능케 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의 원천을 도시의 경제적 기반과 투자환경에 근거한 투자역량, 도시의 지적자원과 학술환경에 기초한 학습역량, 도시의 물적자원과 생활환경에 근거하는 물적역량 그리고 도시의 사회통합 및 관리를 수행하는 사회통합관리역량의 4가지 원천으로 파악하였다. 산업정책연구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전국 11개 도시경쟁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경쟁력을 Porter(1990)의 국가경쟁력과 조동성(1994, 1995)의 9-factor model에 근거하여 산업경쟁력과의 관련성에서 파악하고 있다. 즉 도시의 경쟁력은 단순히 산업자체의 고유한 경쟁력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외부효과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산업의 지역군집(regional cluster of industries)이 지역 또는 도시경쟁력의 기초가 될 수는 것이다.

〈그림 1〉 지역경쟁력 결정요인 모형



출처: 저자작성

2. 지역경쟁력의 개념 정립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쟁력에 관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지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지역경쟁력은 지역의 경제력, 지방의 세계화수준, 지역의 금융환경, 지역의 인적자본, 지역의 기술수준,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수준, 주민 삶의 질 등 8가지 결정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1〉은 지역경쟁력 결정요인도형으로서 지역경쟁력이 8가지 결정요인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III. 지역경쟁력의 통계분석

1. 지역경쟁력 비교지표 선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역경쟁력을 결정짓는 8대 결정요인, 즉 지역의 경제력, 지방의 세계화수준, 지역의 금융환경, 지역의 인적자본, 지역의 기술수준,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수준 및 주민 삶의 질을 〈표 1〉에서와 같이 28개의 구성요소로 나누었다. 또한 〈표 1〉은 이러한 28개의 구성요소가 어떠한 통계자료에 의해 설명되어지는가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지역경쟁력 구성지표 개발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지표의 개념, 분석단위, 조사 시점, 통계분류의 일관성 유지와 자료의 명료성을 유지하기 위해 1997년 12월 발행된 통계청의 「1997년 지역통계연보」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1) 지역경쟁력 결정요인의 구성요소 및 기초통계자료¹⁾

지역경쟁력 결정요인	구 성 요 소	기 초 통 계 자 료
지역의 경제력	경 제 활 택	순인구이동(1), 광공업(11), 출하·재고(4), 에너지소비(7), 판매판로(5), 건설(5), 서비스업(3), 부동산서비스(3), 운수창고서비스(5), 자동차등록(2), 구역화·률(3), 우편·전화(4), 경제활동참가(2), 투자(3), 지가(2), 지역인정·산(3)
	산 업 구 조	제조업종사자(3), 제조업부가가치(5), 취업자수(3), 산업생산구조(4)
	소 비 구 조	운수관광(1), 서비스업(2), 금융저축(5), 자동차납부(4), 유통·유통서비스(1)
지방의 세계화	기 업 경 영 환경	농가인구(4), 광공업종사자(4), 서비스업종사자(4), 취업자수(2), 직업별취업자(6), 고등학교졸업후취업(2), 광공업급여(2), 산재보험(2), 공장부지·경지면적(2), 농업생산량(3), 농업장비(6), 축산업(9), 제조업출하(11), 건설업장비(4), 육상운수업(3), 농업지역지가(1)
	정 료 화	전기통신(2), 정부·민족화(3), 우체국(4), 전신전화국(5), 고통통신물가(1), 도서관시청자(2)
	국 제 화	수상운수(1), 항공운송(2), 여행(13)
지역의 금융환경	사 업 지원 서비스	상업용건물(2), 주택(5), 고속도로(1), 사업관련서비스(4), 전세서비스여객(4), 사업체문트자(5), 종합병원(4)
	금 용 기 관	금융기관점포수(10), 어음(6)
	지 역 금 용 비 증	농업자금(5), 금융서비스생산(2), 예금은행·은행(5), 예금은행대출(6), 요구불예금회전율(2), 예수금(16)
지역의 인적자본	보증·보험업	생명보험료(2), 수입보험료(9)
	경 제 활 동 인 구	인구(3), 인구구성(3), 대학이상졸업자(2), 가구주택(10), 인구증가(4), 경제활동인구(3), 취업자(7)
	학 교 교 육	초등학교(7), 중학교(4), 고등학교(4), 유치원(2), 여성고급인력(12), 전학율(3), 초중등교육기관예산(4)
	평 생 학 습	교육서비스업(6), 도서관(1), 공공드론(17)

출처: 저자작성

1) ()안은 기초통계자료의 숫자임.

〈표 1〉 지역경쟁력 결정요인의 구성요소 및 기초통계자료 (계속)

지역경쟁력 결정요인	구 성 요 소	기 초 통 계 자 료
지역의 기술수준	고급기술인력양성	연구개발서비스업(3), 대학 및 대학교(7), 대학원(11)
	지적자산 형성	특허(3), 실용신안(3), 의장(3), 상표(3)
	산학협동을 위한 전문대학	전문대학(10)
지방행정서비스	지방재정의 효율성	지자체세입·세출(4), 지자체일반회계세입(7), 지방세징수(5), 재정자립도(1)
	지방행정서비스제공	일반행정비(1), 폐수배출단속(4), 시도공무원수(3), 시군구공무원수(3), 사업소공무원수(4), 읍면동공무원수(2), 지방행정관서(3)
	지방정부의 서비스사업화	상수도급수량(2), 사회 및 개인서비스(2), 민간비영리서비스(2), 자자체공기업회계(2), 지자체공익사업비(2), 지자체자체수입(2)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수송관련기반시설	도로·철도(8), 운수관련서비스(3), 자동차등록대수(6), 운수창고 및 통신(4)
	주민편의 기반시설	지목별대지면적(2), 에너지소비(6), 주택건설(10), 상수도(2), 여객수송(6), 공중전화(2), 전기ガ스 및 수도사업(4), 인프라관련 지방세징수액(6)
	자연자원 및 환경관련 기반시설	자연자원면적(7), 하천(3), 경지이용면적(8), 일야면적(3), 구연한소비(1), 토목공사(2), 1차산업별지역내총생산(12), 종합토지세(2), 일반폐기물(3), 특정폐기물(4), 환경오염물질배출(3)
주민의 삶의 질	보건·위생관련 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업(2), 위생서비스업(3), 보건의료물가(1), 의료시설(6), 의료인력(16), 보건소(6), 나환자(4), 의약품판매(6), 의료보험(6), 식품위생(3), 환경위생업소(5)
	생활편의서비스	주차장(4), 도시공원(4), 전화사용도수(1), 가구집기사용품들가(2), 병원 및 의원수(2), 오열비출시설수(4), 대기오염(5), 환경오염(2)
	교양·오락·문화·체육시설	교양오락물가(1), 체육시설보유(11), 문화공간(3), 문화재(4), 영화관(5)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이혼자(2), 가구수(1), 자가소유(3), 혼인·이혼(9), 비경제활동인구(5)
	사회복지시설	산재보험(1), 사회복지비(2), 보건진료소(2), 의료보험(1), 사회복지시설(7), 특수학교(8), 생활보호대상자(9)
	공공안전관리체계	경찰(2), 소방(2), 자동차사고(7)

출처: 저자 작성

「1997년 지역통계연보」는 정부의 각 부처 및 기타 국내주요기관에서 작성한 지역별 통계자료이며 각 지역의 면적·기상·인구, 농업·임업·어업, 광광업·에너지, 건설·주택·상하수도, 도소매·서비스, 운수·통신, 노동, 물가·소득, 금융·재정, 보건·환경·사회보장, 교육·문화, 공공행정의 12개 분야에 186개 통계표로 분류된 방대하고 종합적인 지역통계자료

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지표를 지역경쟁력 실증분석 개념에 맞게 재분류하여 표로 나눠낸 것이 <표 1>이다.

2. 지역경쟁력의 분석방법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관한 12개 분야의 186개 통계표에서 추출한 총 751개 지표를 <표 1>에서와 같이 28가지 경쟁력구성요소지표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8 대 경쟁력 결정요인지표로 구분하였다. 매 단계에서 통계자료를 결합함에 있어 각 지표의 지역 경쟁력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하여 가중산술평균 한 후 상대적인 절수와 순위를 정하였다. 각 단계별 구성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통계기법은 정진호(1995)의 KFC분포결합법(Statistical Majorization of the Key Factor for Competitiveness)이라는 다변량 통계 분석(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방법이다. KFC분포결합법은 경제이론, 학리적 설득, 유형화과 동일 근거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선택된 다양한 분포형태의 통계지표를 분포를 결정하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여 하나의 표준화된 분포로 결합하는 통계기법이다²⁾.

이 분석방법의 목적은 각 통계지표가 지역경쟁력지표 설정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추계하는데 있다. KFC분포결합법의 기본핵심은 다변량 통계군의 평균치로부터 표준화된 상대적 위치의 변화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변수의 분산·공분산 행렬(variance-covariance matrix)에 대한 아이겐 분석(eigen decomposition)을 통해 단위행렬(identity matrix)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특성벡터(eigen vector)를 특성치(eigen value)의 평방근으로 나누어 가중평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가중치가 각 변수의 종합지표 드롭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임으로 이를 경쟁력기여도로 활용한 것이다(정진호 외, 4인, 1995).

이상의 설명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즉, m 개를 가진 n 개 변수의 표준화된³⁾ Z 의 이터행렬 Z 를 이용하여 통계적 분포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벡터 s 를 찾는 것이다.

$$Z = \frac{z_j - \bar{z}_j}{\sigma_{z_j}} \quad (\text{단, 평균} = 0, \text{분산} = 1)$$

표준화된 Z 의 대표벡터 s 는 2차선형 최적변형(linear-quadratic optimization)을 통해 도출된다. 즉, Z 의 분산·공분산행렬 $R = \frac{ZZ^T}{m}$ 을 복소수 특성치분해(complex number

2) KFC분포결합법에 의해 계산된 경쟁력지표는 다변량 베이터행렬의 선형변형이며 비중분포(share distribution)의 대변치(summary measure)이므로 선형성을 유지하며, 통계정보이론(statistical information theory)에 의한 그룹간-그룹내 정보분해(information decomposition of between-group and within-group)가 가능하다 (Theil, 1976; Marshall & Olkin, 1979; Maasoumi-Teeng, 1985; Maasoumi, 1986).

3) 통계지표를 가공기준에 따라 변환하더라도 표시단위가 인구수, 시설 수, 면적, 금액 등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통계치 자체가 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지표의 통계치를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것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igen decomposition) 함으로써

$$S = Z T \text{ 와 } I' S I = I' T I \text{ (즉, } s' s = m, s = S I)$$

을 만족시키는 선형변형(linear transformation) T 를 찾게되며, T 는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T I = V d$$

여기서 V 는 R 의 정규화된 특성벡터(eigen vector)를 특성치(eigen value)에 맞추어 정렬한 $(n \times n)$ 행렬이며, $d = \frac{1}{\sqrt{d_m}}$ 는 $(n \times 1)$ 정규화된 특성치(eigen value)의 벡터이다. 복소수 특성치분해를 통해 R 에서 얻어진 복소수폐어(complex conjugate pair)는

$$R \bar{V} = \bar{V} D \text{ 또는 } D = \bar{V}^{-1} R \bar{V}$$

이므로 $s = Ze$ 와 $e \equiv Vd$ 에 의해 대표분포벡터 s 와 가중치벡터 e 가 구해진다.

여기서 가중치요소 e_i 는 각 통계지표가 분포모양에 따라 대표지표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여도이며, $\frac{e_i}{\sum_{i=1}^n e_i} \times 100 \times n$ 로 가중평균된다. 경쟁력지표의 점수는 가장 낮은 점수를 50점으로 고정시켰을 때 대표분포의 모양에 따라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g_i = 50 + \frac{10 \times [s_i - \min(s)]}{\sigma_i}$$

최종적으로 경쟁력 순위는 경쟁력지표 점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정리하면 <표 1>에 기록된 751개의 기초통계지표를 지역경쟁력의 실증분석기법에 따라 8대 경쟁력 결정요인, 28개 구성요소로 분류하고, 추계된 각 변수의 경쟁력 기여도를 위해서 설명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100을 기준으로 변환한 것이다.

IV. 부산광역시의 지역경쟁력 평가

우리 나라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부산이 차지하고 있는 경쟁력 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앞장에서 상술한 통계분석방법에 따라 계산된 지역경쟁력지표를 통해 종합순위를 평가하고, 이어서 8대 경쟁력 결정요인 부문별 경쟁력 순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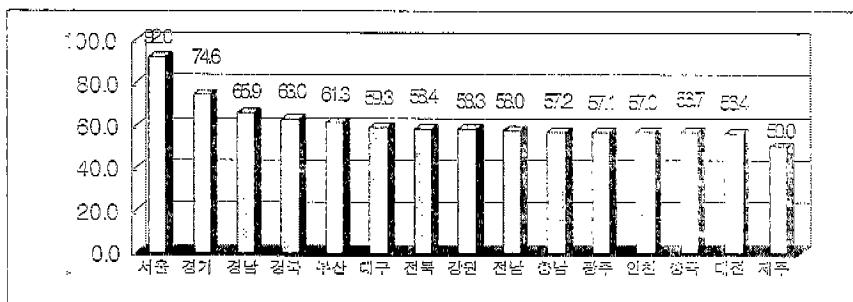
1. 종합경쟁력 평가

<그림 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산의 지역경쟁력은 61.3으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경북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록 부산의 경쟁력을 전국 5위 도시 중 2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서울의 경쟁력과는 매우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산을 뒤따르고 있는 대구를 비롯해 전북, 강원도, 전남, 충남, 광주, 인천, 충북, 대전 등 9개 광역자치단체(제주도 제외)가 부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 부산의 경쟁력은 결코 전국 제2의 드시트서의 위상이 끝맞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V 장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의 역할과 기능 확악에 필요한 경쟁력 비교대상 지역선정⁴⁾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의 지역경쟁력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그림 3>을 통하여 경쟁력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8대 부문, 즉 지역의 경제력, 지방의 세계화, 지역의 금융환경, 지역의 인적자본, 지역의 기술수준, 지방행정서비스수준,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면, 부산은 지역의 경제력 수준에서 9위, 지방의 세계화 수준에서 3위, 지역의 금융수준에서 6위,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에서 3위, 지역의 기술수준에서 4위, 지방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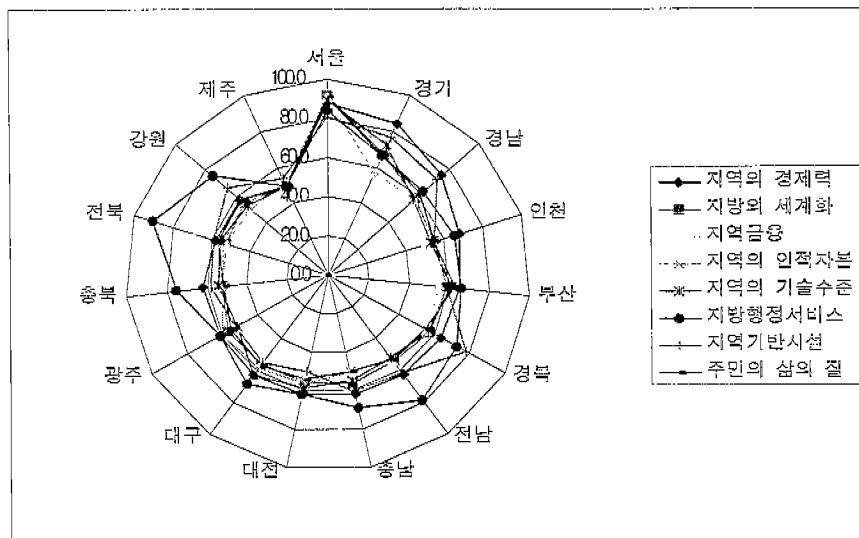
서비스 수준에서 11위,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수준에서 9위, 주민의 삶의 질 수준에서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세계화 수준과 인적자본 수준은 3위로 비교적 경쟁력

<그림 2> 지역경쟁력지수



4)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의 역할과 기능의 비교대상을 국제적 수준의 해외도시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하나 본 연구의 범위와 대상이 국내 15개 광역자치단체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 범위 내에서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자 단 연구의 일관성 유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림 3〉 지역경쟁력의 8대 결정요인수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경제력 수준이 9위, 행정서비스 수준과 주민 삶의 질 수준이 각각 11위를 기록함으로써 부산의 지역경쟁력은 5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⁵⁾.

한편 서울은 경제력(2위)과 행정서비스 수준(2위)을 제외한 도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수도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나라 종래의 수도권 중심의 각종 개발정책과 서울 집중화현상에 따른 불균형발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가운데 경기가 지역의 경제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전북이 행정서비스수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2. 부문별 경쟁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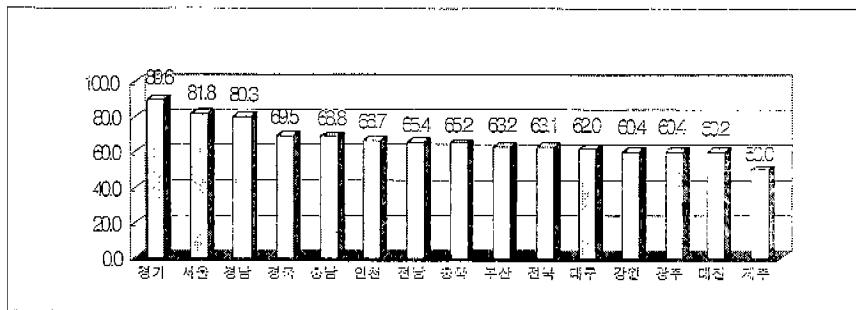
지역경쟁력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8대 부문별 부산의 경쟁력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경제력 수준

〈그림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산은 지역경제력 수준에서 63.2를 기록하여 경기,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인천, 전남, 충북에 이어 전국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산의 지역경쟁력이 전국 5위인 것과 비교하면 부산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뛰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5대 광역시 가운데 지역경쟁력이 전국 12위인 인천보다 부산의 경제력이 뛰지고 있다.

5) 지면판계상 8대 부문별 결정요인 분석자료를 논문에 첨부할 수 없었으나 저자에게 문의하면 구할 수 있음.

〈그림 4〉 지역의 경제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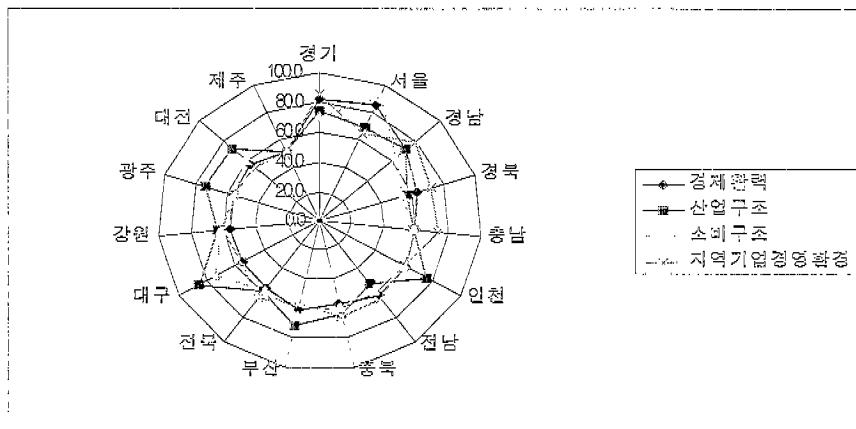


한편 경기는 경제력 수준에서 서울을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권에 있는 경기, 서울과 경남은 80 이상의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 주고 있는데 비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북을 비롯하여 충남 등 11개 지역이 60대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어 상위권과 기타 지역간의 경제력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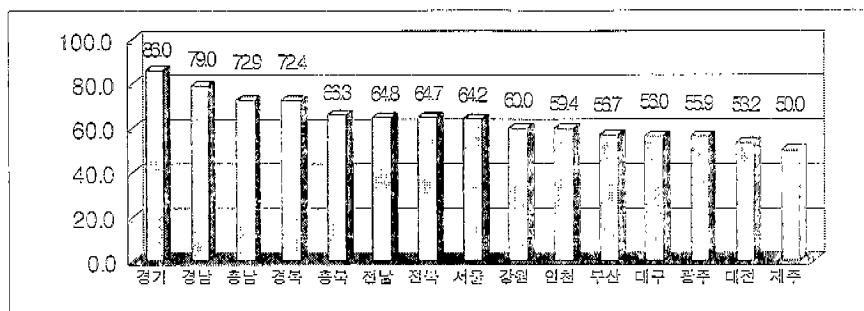
전국 9위에 머물고 있는 부산의 지역경쟁력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부산의 지역경쟁력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활력, 산업구조, 소비구조, 지역의 기업경영환경 등 4개의 세부지표를 〈그림 5〉를 통해 살펴보면, 부산은 소비구조는 4위, 산업구조는 6위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활력수준은 7위, 기업경영환경 수준은 11위로 부산의 지역경쟁력을 감퇴시키는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서 지역의 경제력수준에 암으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기업 경영환경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면, 부산의 경제력 수준이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보다 분명해 진다. 비록 지역의 기업경영환경이 지역의 경제력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기업경영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기업이 진출할 동기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들도 지역을 떠나가게 되어 이 지역의 경제력은 급격히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지역경쟁력 제고에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존 기업의 경쟁력제고뿐만 아니라 신규기업진출 유도를 위해서 지역의 기업경영환경 개선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지역 경제력 수준의 결정요인



〈그림 6〉 지역의 기업경영환경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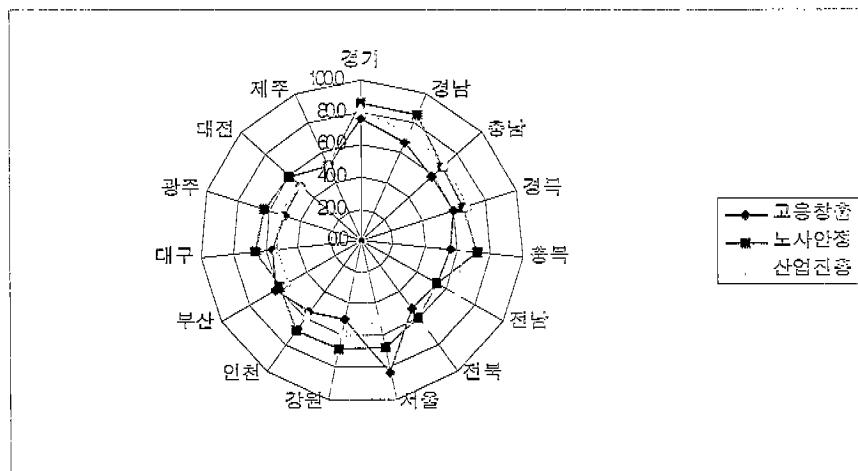


그럼, 부산의 기업경영환경 수준은 어떠한가? 〈그림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산의 기업경영환경 수준은 전국 11위로 크게 열악한 상태이다. 특히 부산의 기업경영환경 수준(56.7)은 경기(86.0)나 경남(79.0)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그림 7〉은 부산의 기업경영환경 수준이 크게 낮은 이유를 지역의 기업경영환경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고용창출, 노사안정, 산업진흥 등 3개의 세부지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부산은 고용창출 수준에서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노사안정과 산업진흥 수준은 모두 10위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부산의 기업경영환경 수준은 전국 11위로 나타나게 되었다.

기업경영환경이 가장 우수한 경기에 비하면 부산은 고용창출(경기: 75.8, 부산: 60.7), 노사안정(경기: 85.3, 부산: 57.3), 산업진흥(경기: 81.9, 부산: 51.6) 등 3개의 세부지표 모두에서 커다란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남에 비하면 노사안정(경남: 85.2)과 산업진흥(경남: 73.3)에서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지역 기업경영환경의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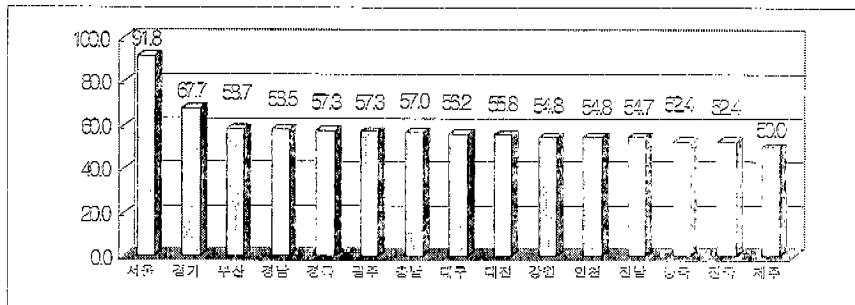


2) 지방의 세계화 수준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의 세계화 수준은 58.7로서 서울(91.8)과 경기(67.7)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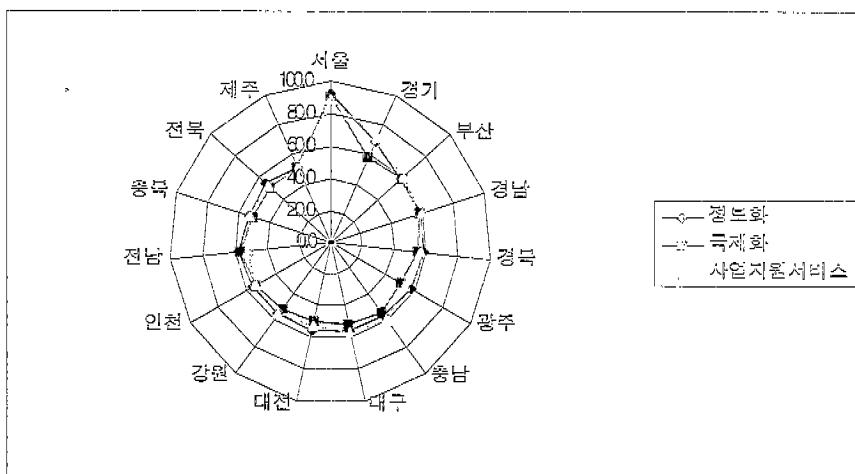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을 비롯하여 경남(3위), 경북(4위), 광주(5위) 등 대부분의 지역이 거의 비슷한 세계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서울의 세계화 수준은 단연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 지방의 세계화 수준



또한 〈그림 9〉는 지방 세계화 수준의 결정요소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 세계화 수준의 구성요소인 정보화, 국제화와 사업지원서비스 수준을 살펴보면, 부산은 정보화 수준에서 4위, 국제화 수준에서 2위, 사업지원서비스 수준에서 3위를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세계화 수준이 8위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서울과 비교하면 정보화(서울: 92.5, 부산: 58.4), 국제화(서울: 90.5, 부산: 59.5), 사업지원서비스(서울: 88.9, 부산: 60.2) 등 다른 세부지표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와 비교하면 부산은 국제화에서는 앞서가고 있으나 정보화와 사업지원서비스 수준에서 다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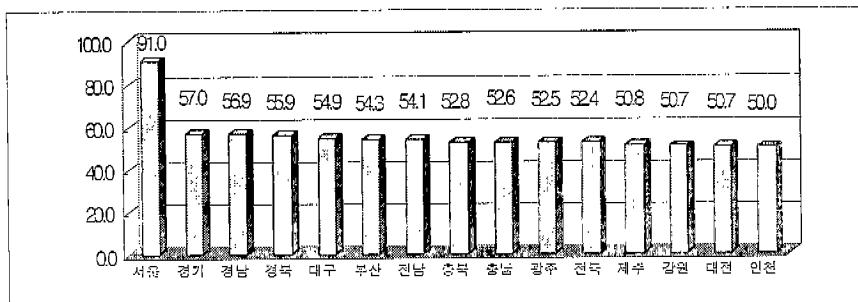
〈그림 9〉 지방 세계화 수준의 결정요인



3) 지역의 금융환경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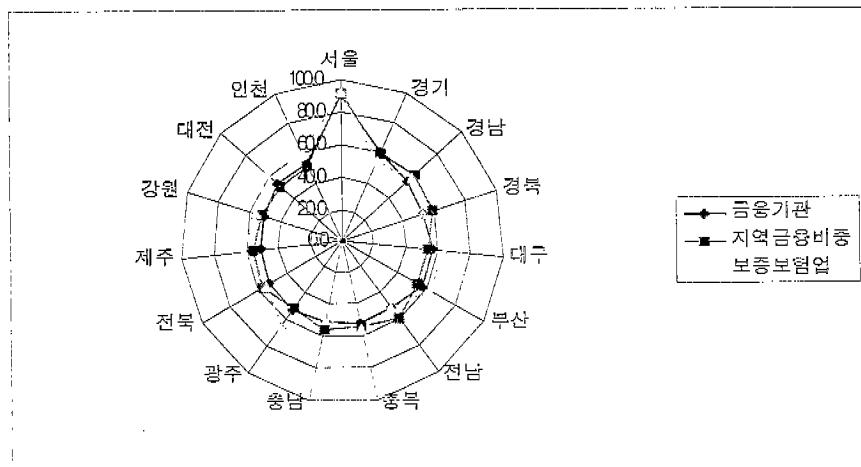
〈그림 10〉이 보여주듯이 부산의 지역금융 수준은 54.3으로 전국 6위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1위인 서울을 제외하면 2위인 경기를 비롯하여 모든 지역의 지역금융 수준이 60이 도달하지 못 한다는 사실과 강원도, 대전, 인천이 제주도에 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10〉 지역의 금융수준



지역의 금융수준에서 서울과 기타 지역과의 격차가 이처럼 큰 요인은 무엇인가? 〈그림 11〉을 통해 지역금융 수준을 결정하는 3개의 세부지표, 즉 금융기관, 지역금융비중, 보증·보험업 수준을 살펴보면, 서울이 3개의 세부지표 모두에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부산의 경우 금융기관과 보증·보험업 수준은 모두 3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지역금융비중이 10위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거의 모든 본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지역금융비중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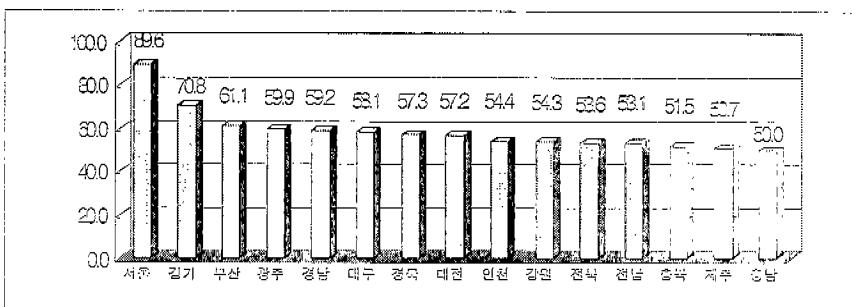
〈그림 11〉 지역금융 수준의 결정요인



4)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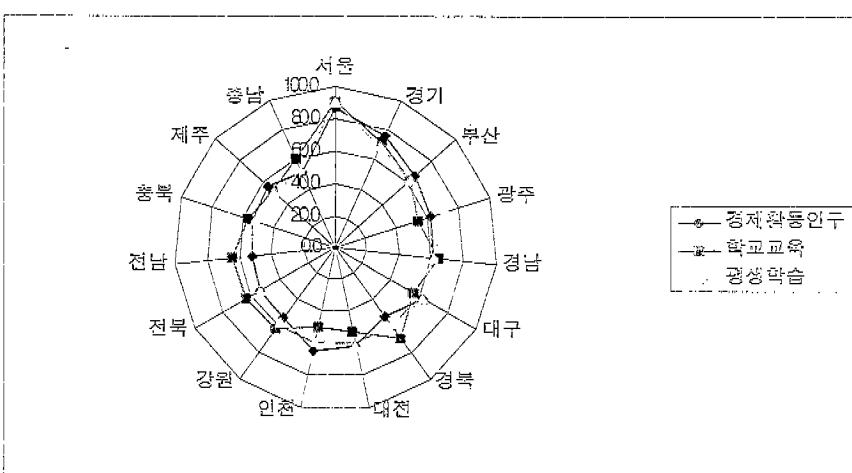
〈그림 12〉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산의 인적자본 수준(61.1)은 서울(89.6), 경기(70.8)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가 381만 명인 부산의 인적자본 수준을 인구가 126만 명인 광주(59.9), 인구가 245만 명인 대구(58.1), 인구가 127만 명인 대전(57.2)과 비교해보면 부산의 인적자본 수준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⁶⁾

〈그림 12〉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



부산의 인적자본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림 13〉을 통해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의 세부지표인 경제활동인구, 학교교육의 질, 평생학습의 수준을 살펴보면, 부산은 경제활동인구 수준에서 3위, 학교교육 수준에서 7위, 평생학습 수준에서 5위를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부산의 인적자원 수준이 3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부산은 3개의 세부지표 모두에서 서울과 경기에 비해 커다란 열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수준에서는 광주(70.8)가 오히려 부산(61.6)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지역 인적자본 수준의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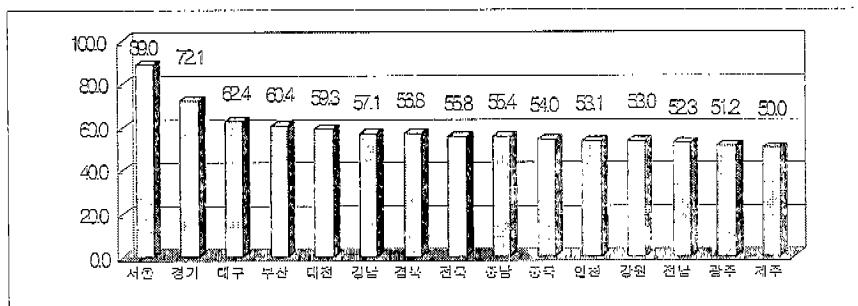


6)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을 결정짓는 통계지표는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인구자료 외에 경제활동인구, 학교 교육, 평생학습 등에 관한 98개의 통계자료이므로 인구가 많다고 해서 지역의 인적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5) 지역의 기술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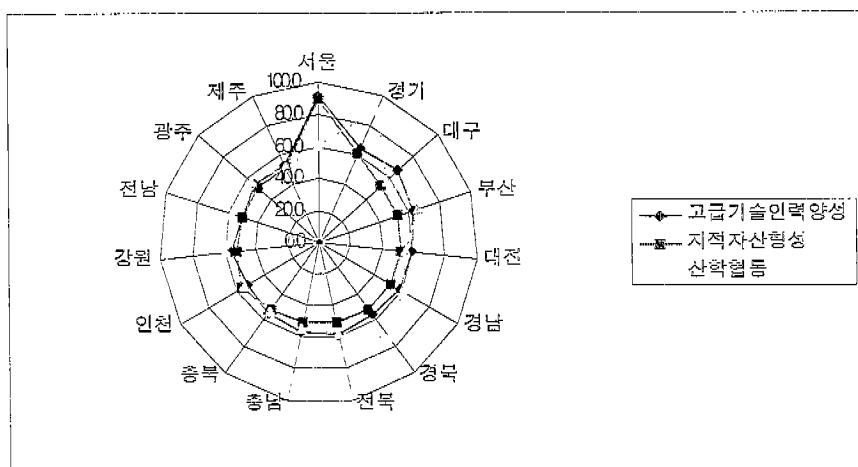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의 기술수준(60.4)은 서울(89.0), 경기(72.1), 대구(62.4)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5〉를 통해 지역의 기술수준을 결정하는 3대 세부지표인 고급기술인력양성, 지적자산형성, 산학협동을 위한 전문대학의 수준을 살펴보면, 부산은 고급기술인력양성 수준에서 4위, 지적자산형성 수준에서 4위, 산학협동을 위한 전문대학 수준에서 3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그림 14〉 지역의 기술수준



서울은 부산에 비해 고급기술인력양성(서울: 91.5, 부산: 61.7)과 지적자산형성(서울: 89.5, 부산: 52.7) 수준에서는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학협동을 위한 전문대학수준(서울: 60.0, 부산: 65.4)에서는 오히려 부산이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의 산업협동을 위한 전문대학 수준(65.4)은 대구(57.3)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의 경우 전체 기술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산학협동을 위한 전문대학 수준(90.6)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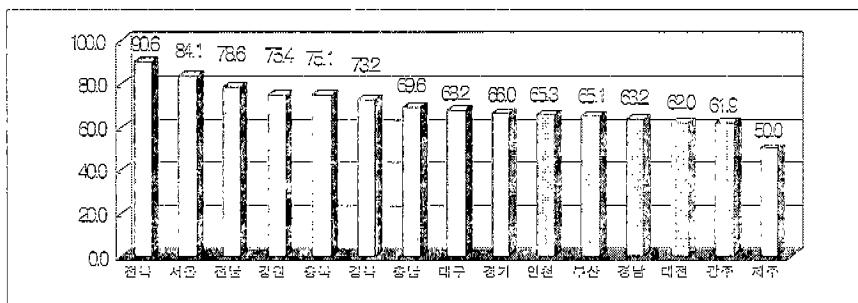
〈그림 15〉 지역 기술수준의 결정요인



6) 지방의 행정서비스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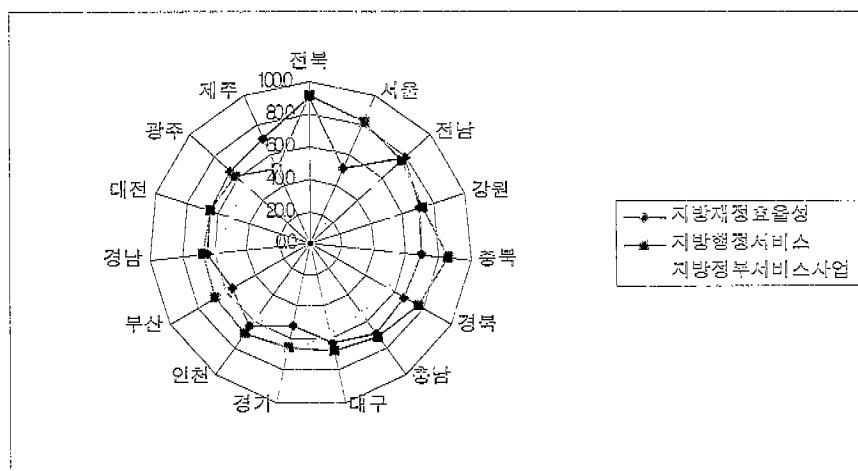
부산의 행정서비스 수준(65.1)은 <그림 16>이 보여주듯이 11위로 매우 낮은 수준을 끌어내고 있다. 전북(90.6)이 서울(84.1)을 차지하고 1위를 기록하였으며, 전남(78.6), 강원(75.4), 충북(75.1), 경북(73.2), 충남(69.6) 등 대부분의 도가 모든 광역시 보다 행정서비스 수준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보다 낙후된 행정서비스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은 경남, 대전, 광주, 제주로 표기되었다.

<그림 16> 지방행정서비스의 수준



<그림 17>를 통해 지방행정서비스 수준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지방재정효율성이 지방행정서비스전달활동이 각각 13위와 10위로 특히 낮은 수준인데 반해 지방정책부서화 사업화 수준은 3위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지방재정효율성(1위)과 지방행정서비스전달활동(1위) 수준이 최고수준인데 반해 지방정책부서화 사업화 수준은 9위에 그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서울(2위)의 경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 재정효율성을 활발한 행정서비스전달활동(3위)과 뛰어난 서울시의 서비스사업화(1위)를 통해 반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7> 지방행정서비스 수준의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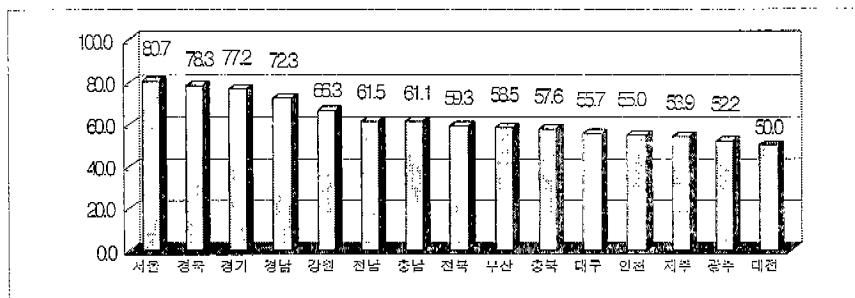


7)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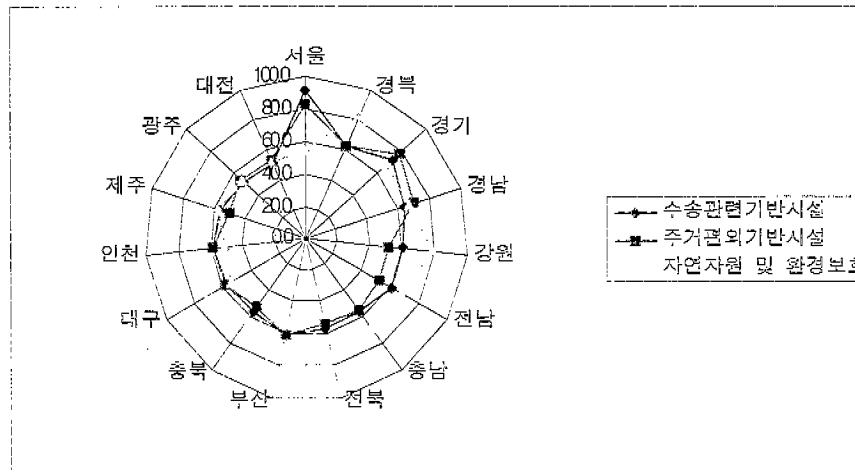
〈그림 18〉은 부산의 사회기반시설 수준이 58.5로서 9위를 나타내고 있어 부산의 사회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충북을 제외하면 부산보다 우월한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경북(78.3)을 비롯하여 경기(77.2), 경남(72.3), 강원(66.3), 전남(61.5), 충남(61.1), 전북(59.3) 등 모두 광역시가 아닌 道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은 사회기반시설 수준이 80.7로 1위를 차지함으로써 수도로서의 위상을 지키는 한 편 경북과 경기의 사회기반시설은 서울에 거의 유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사회기반시설이 9위로 매우 열악한 이유를 〈그림 19〉를 통해 살펴보면,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의 구성요소인 수송관련기반시설, 주거편의기반시설, 자연자원 및 환경보호 가운데 특히 자연자원 및 환경보호 수준(53.0)이 매우 낮은 것이 그 이유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이 가장 양호한 서울의 경우에도 수송관련시설(91.7)과 주거편의기반시설(82.7)은 매우 양호한데 반해 자연자원 및 환경보호 수준은(54.9)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대구(53.6), 인천(50.0), 광주(53.1)의 경우에도 자연자원 및 환경보호 수준이 매우 낮아 서울을 제외한 전국 5대 광역시의 사회기반시설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8〉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수준



〈그림 19〉 지역 사회기반시설 수준의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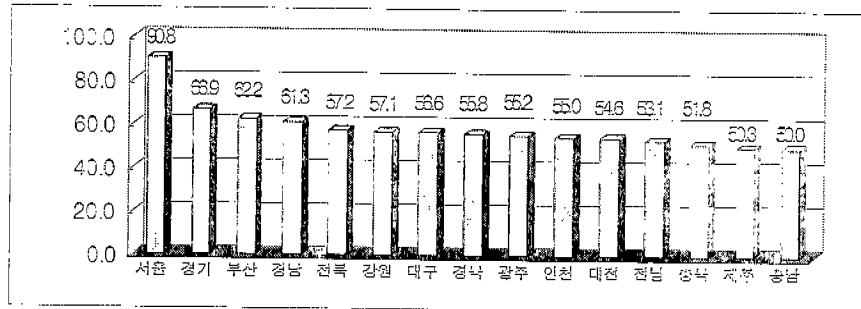


8) 주민의 삶의 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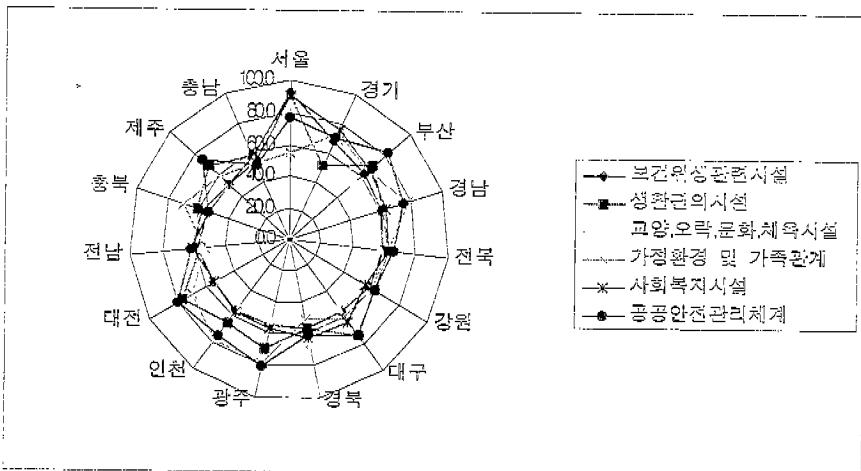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면 <그림 20>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시민의 삶의 질 수준(62.2)은 서울(90.8)과 경기(66.9)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주민의 삶의 수준에 있어서도 서울과 타 지역의 간의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61.3)이 부산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충남(50.0)이 가장 열악한 삶의 질 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부산은 공공안전관리체계에서는 1위, 보건위생관련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모두 3위를 기록하여 부산이 매우 안전한 도시이며 보건위생과 사회복지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도시로 나타난 반면,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는 7위, 교양·으락·문화·체육시설은 8위로 나타나 부산은 가족과 시민의 연기 및 문화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주민의 삶의 질 수준



<그림 21> 주민 삶의 질 수준의 결정요인



V.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의 역할과 기능

부산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부산이 추구해야 할 경쟁력 강화방향을 지금까지 분석한 지역경쟁력지표와 8대 부문별 경쟁력결정요인지표를 통해 살펴보고, 이어서 부산의 구체적인 부문별 경쟁력 강화방안과 이에 걸맞는 부산광역시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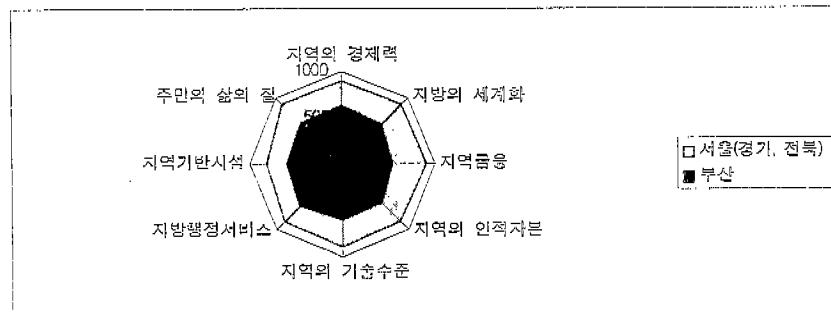
1. 부산의 경쟁력강화 기본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은 지역경제력 부문(경기 1위)과 지방행정서비스 부문(전북 1위)을 제외한 6대 부문에서 전국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서울에 비하면 모든 분야에서 매우 큰 격차로 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의 경쟁력이 단시일 내에 서울을 제치고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전국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는 서울도 삼성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1997)에 의하면 세계 30가 도시 중 19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지역경쟁력을 겸비한 도시로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최고 지역을 기준으로 종합경쟁력과 개별 분야별 경쟁력 격차를 파악하여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8대 부문별 최고수준의 지역과 부산간에 존재하는 격차가 얼마나기를 파악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고색을 통해 부산시의 경쟁력 제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산시의 경쟁력 제고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은 부산시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부산의 8대 부문별 경쟁력 수준을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과 비교해보자. <그림 22>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듯이, 부산의 경쟁력 수준은 전국 최고 지역의 경쟁력 수준과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은 지역경제력에서 경기의 70.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세계화 수준에서 서울의 63.9%, 지역금융환경 수준에서 서울의 59.7%, 인적자본 수준에서 서울의 68.2%, 기술수준에서 서울의 67.9%, 행정서비스 수준에서 전북의 71.9%, 사회기반시설 수준에서 서울의 72.5%, 삶의 질 수준에서 서울의 68.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전국 최고수준 지역 대비 부산의 지역경쟁력 수준



따라서 부산의 경쟁력 강화 기본방향은 일견 모든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으나, 부산이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부산이 중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부문별 경쟁력강화 기본방향과 연계된 부산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부응하는 부산광역시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부산의 부문별 경쟁력 강화방안과 부산광역시의 역할과 기능

1) 지역경제력 강화방안

IV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산의 지역경제력 수준은 전국 9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러한 낮은 수준의 경제력 결정요인으로는 전국 4위의 소비구조, 6위의 산업구조와 7위의 경제 활동수준, 11위로 극히 낮은 부산의 기업경영환경수준을 손꼽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의 부산이 이처럼 혼약한 경제력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50여년간의 부산의 부산경제 발전사를 회고해 볼 때 그 원인은 한마디로 혁신의 부재와 세도운 산업 창출능력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발·섬유산업 등 과거의 소수 핵심역량에 의한 경쟁우위가 산업구조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기존기술이나 경영판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오늘날 낙후된 부산경제를 시현하고 있는 것이다(임정록·최병호, 1996; 국토개발연구원, 1997).

따라서 부산의 지역경제력 강화방향은 부산의 기업경영환경개선을 바탕으로 기존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창업의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이를 통해 부산경제의 활동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부산의 경제력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부산의 기업경영환경개선방안을 살펴보자. 본 연구결과⁷⁾에 의하면, 부산의 기업경영환경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경영환경수준을 자랑하는 경기에 비하면 고용창출수준에서는 경기의 80.1%, 노사안정수준은 경기의 37.2%, 산업진흥수준은 경기의 63%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산의 기업경영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창출, 노사안정 및 산업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산 기업의 98%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중소기업지원 및 경쟁력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 1996; 부산발전연구원, 1996; 부산광역시, 1997). 이를 위한 주요정책으로 첫째, 중소기업 윤전자금 및 선용자원 업무지원 강화, 기술경쟁력 지원업무 강화, 제품의 판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강화시키거나야 할 것이며, 둘째, 지역상품 수출지원업무 및 홍보전략 강화, 국제교류 및 산업협력사업 활성화를 포함하는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셋째, 중소기업 일률지원체계의 구축과 벤처기업 지원체계의 강화를 포함하는 중소기업지원 시스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강화정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의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의 노사안정과 산업진흥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부산의 기업경영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기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창업 및 신규기업의 진입을 가져와 부산 지역경제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7) 구체적인 자료제시는 지면관계상 생략함.

부산의 산업구조고도화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국내 제1의 항구도시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양관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처, 1995; 부산발전연구원, 1996; 부산광역시, 1997). 이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해양관련 R&D 및 해양개발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관광·레저산업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산을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추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신항만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며, 부산 신항만 배후지에 국제복합물류단지 조성과 함께 항만전용 배후수송로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성 항만부대사업을 중점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소프트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금융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디자인·영상산업의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산업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보산업체의 조직화와 정보산업체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정보제공자(IP) 육성 등 정보산업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하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가 계획하다 포기한 부산정보단지 개발계획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테크노파크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이 비교우위가 있는 선박기계부품산업과 일반기계 및 메카트로닉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지역산업(신발, 석유, 철강, 조선)의 고부가가치화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종욱 외, 1998).

부산의 소비구조고도화방안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경제시책이 제대로 시행되어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면 저축의 증대와 함께 자연스럽게 소비구조는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세계화 추진방안

부산의 세계화 수준을 서울과 비교하면, 부산은 정보화수준에서 서울의 63.1%, 국제화수준에서 서울의 65.8%, 사업지원서비스수준에서 서울의 67.8%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산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화, 국제화, 사업지원서비스체계를 모두 개선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먼저 정보화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 정보화촉진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정보화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정부의 국가초고속정보통신망 추진계획과 연동하여 정보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국통신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내 정보통신망의 적체를 해소하고 고속노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부산광역시, 1997). 둘째, 정보문화의 확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회·생활정보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요시책으로 부산광역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서비스, 시민 인터넷전화 접속서비스, 시민 인터넷 전자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對시민 정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확립하여 안탕민원정보서비스, 의정정보서비스, 교통관광지리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부산의 이미지에 걸맞는 사이버 해양박물관 조성과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시립가상대학 원격교육서비스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김인환, 1996). 셋째, 공무원, 산업체 종사자, 일반시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관련 이벤트 개최를 통해 정보마인드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부산의 국제화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부산을 세계화에 앞서가는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민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대상 국제화교육프로그램 및 국제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교류

단체의 육성 등을 통하여 국제화를 위한 시민적 여전조성을 강화해 나가며, 부산권 출신 해외교민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세계 각 권역별 연구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의 고 및 홍보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산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부산 세계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과 구청차원의 홍보물을 정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해외주재 한국공관 및 부산 주재 외국공관의 홍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산 출신 해외진출 기업인 및 유학생을 통한 홍보기능을 강화하며, 세계주요도시의 부산주재사무소를 적극 유치하는 동시에 세계주요도시에 부산 해외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도시외교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부산발전연구원, 1996). 셋째,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포시관 및 간판의 외국어 표기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외국인 아동 및 학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부산 정주외국인 대상 한국학 및 부산학의 강좌를 개설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시민과 외국인과의 정기교류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부산의 국제화와 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컨벤션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 수요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컨벤션 유치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제회의 및 UN관련기구의 국제기구 유치 등 보다 적극적인 컨벤션 유치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지역금융환경 개선방안

부산의 금융환경은 서울에 비해 금융기관수준은 63%, 지역금융비중은 58.5%, 보증·보험업수준은 68.1%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부산의 국제적인 정보·무역·물류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21세기 동아시아의 금융센터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둔현동 종합금융단지조성을 철저히 진행하고, 선불카드소 및 중권거래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외국은행본사 유치 및 해외금융시장 개설 등을 통해 금융국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극히 낮은 수준의 지역금융비중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증·보험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통해 부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지역의 인적자본수준 제고방안

부산의 인적자본수준을 전국 최고 수준의 서울과 비교해보면, 부산의 경제활동인구수준은 서울의 75.8%, 학교교육수준은 서울의 68.2%, 평생학습수준은 서울의 68.2%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 지역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인적자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맞는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경제활동인구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종래의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평생에 걸쳐 다양한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산업체 현장연수 등을 통해 실업계고교 교육의 현장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전문대 및 대학간 교육과정의 연계운영을 통해 전문대학과 대학의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며, 여성 및 취약계층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적인 학교경영

체제와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합형성교육센터의 설립과 주말대학과 계절대학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기술관련 교육강화와 학교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해 교육정보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산의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근본적이 문제 중 하나는 고급인력이 지역을 떠나가는 brain drain 현상 때문이다 (임정혁·장영재, 1997). 부산에서 고용받은 훌륭한 인재가 부산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국가경쟁력제고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의 지역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부산에 훌륭한 인재가 떠나지 않는 것은 물론 타 지역의 인재가 부산에 몰려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일자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부산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부산의 지역경쟁력 제고방안은 부산의 인적자본축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지역의 기술수준 제고방안

부산의 기술수준을 서울과 비교해 보면, 부산은 고급기술인력수준에서 서울의 67.4%, 지역자산형성수준에서 서울의 58.9%로 극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산학협동을 위한 전문대학수준에서만 서울을 9% 능가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산은 고급기술인력수준과 지역자산형성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산의 기술경쟁력 제고방안은 부산의 경제력제고방안 및 인적자본수준 제고방안과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먼저 부산의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지역기술혁신체계(regional system of innovation)를 구축하여 부산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공동기술개발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종훈, 1995). 이를 위해 부산의 지역유망산업과 관련된 자동차부품단지 조성, 기계산업 및 메카트로닉스산업 전문단지 조성, 신발·조선·철업화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부산시와 부산자역 대학이 공동으로 기술혁신과 기술개발을 위한 부산테크노파크를 조성하며, 부산의 입지적 특성에 부합하는 해운·항만산업, 해양개발산업, 해양관광·레저산업, 수산가공업, 조선·기자재산업 등 해양관련산업과 관련된 첨단기술 및 소프트웨어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해양특화산업연구소의 설립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정보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부산의 주요 부도심에 정보통신서비스,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정보통신기기판매 등과 관련된 업체들을 집적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산업 및 연구개발단지 조성과 함께 정보통신서비스기업의 창업보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지원센터의 설립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지사등 일원에 축소계획 중인 부산과학산업단지를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부산시 행정서비스수준 제고방안

IV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행정서비스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이었으며, 부산시의 행정서비스수준은 전국 11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부산은 전북에 비해 지방재정효율성

에서 전북의 62%, 지방행정서비스제공 수준은 전북의 73.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서비스사업화 수준에서는 전북을 10.5% 높이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행정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면서, 행정서비스제공수준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행정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 강화시켜 나가야 할 방안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현재 부산시가 행정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IBS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결제 및 전자메일을 통한 문서없는 행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기획능력을 강화하고 군수관리기능은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조직을 간소화시켜가고 있으며, 행정직원의 정도활용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인정보파일리지를 시행하고 있고, 조직 R&D강화를 통한 쟁크랭크의 기능강화와 기초통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한 기초통계 행정을 강화해나고 있다(부산광역시, 1997).

이와 더불어 부산시 행정생산성 제고를 위해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분야로는 세로운 행정수요 충족에 요구되는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업무전산화·업무SOP화·사무처리자동화 등 행정업무 과학화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충무치, 1997). 또한 보직관리 개선을 통해 직원질문성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세자화시대에 요구되는 1인 1외국어 이상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재정효율성 제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사업은 과급호화와 비용에 관한 충분한 비용편익분석을 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며, 둘째, 공공행정서비스제공분야에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재 및 행정의 수비범위를 과감히 줄여나가면서, 신세월 벌금과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한국행정연구원, 1996). 셋째, 수익자부담 원칙과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극 적용하여 공공재 가격을 현실화하면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강인재, 1997). 넷째, 투자설사와 중기재정계획을 실질화하고, 재정상황에 따른 투자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자유치부서를 전문화하여 민자유치사업 벌금을 축전하고, 제3섹터 확대를 통한 경영수입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부산시 차주 프로그램으로 개선 노력과 함께 의체 및 재특자금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정운영 상황의 공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지정운영 능률의 전문화를 통해 지정제도의 개선과 합리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Osborne & Gaebler, 1993). 일곱 번째, 성과 위주 예산제도 및 자본예산제의 도입을 통한 예산편성 과학화를 추구해야 하며(이지원, 1997), 마지막으로 지방화시대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조정, 지방교부세 및 지방잉여금 조정 등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김병섭, 1997).

부산시의 행정서비스 제고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무소신·투책임·무기력의 3무현상을 극복하고, 규장중실의 편의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질적이고, 전문적이며, 신속하고, 공정하며, 창의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계식·문형표, 1995) 이를 위한 몇 가지 주요시책을 살펴보면, 네가지브이시스템 일률제 등의 도입을 통해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행정 TQM(Total Quality Management)제를 도입하여 행정의 으름간소화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Cyber시정확대를 통해 전자민원처리 및 재택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충처리, 분쟁해결, 행정실수 보상제 등의 확대를 통해 행정구제기능을 강화해나가면서 시민 갑사 및 조사청구제 등을 통한 시민감시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종열, 1997).

7) 부산의 사회기반시설 확충방안

부산의 사회기반시설수준을 전국 최고의 서울과 비교해보면, 자연자원 및 환경보호수준은 서울의 96.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수송관련 기반시설은 서울의 65.7% 수준이며 주거편의 기반시설은 72.8%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산은 특히 수송관련기반시설과 주거편의 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부산의 도시기반시설이 공업화 사회에 적합한 도시 구조와 생활개선을 위한 주택, 전기, 가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학교, 병원, 공원, 교통시설 등의 건설에 역점을 두어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중심적인 도시기반시설은 정보화 사회와 향후 탈정보화 사회의 특성인 고도화·다양화·네트워크화에 부합하는 헬레포트, 복합수송시설,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등이 주축이 될 것이다 (부산발전연구원, 1996). 따라서 부산의 수송관련시설 정책의 핵심이 되는 교통정책은 교통시설공급 중심에서 교통수요관리체계로 변화할 것이며, 간선도로소통 위주에서 지구내 교통환경개선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행정구역단위의 교통계획을 광역교통계획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항만으로서의 부산의 기능을 국제교류기능을 종합한 국제물류도시, 지역거점도시, 자주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인 TRI-PORT(신공항건설, 부산신항단건설, 부산정보단지건설(추진포기 재검토 요망됨))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 육상통로(Land-Bridge)기능과 수송수단간 환승체계구축에 따라 나타나는 항만화들의 시가지 진입배제를 위한 배후수송망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산발전연구원, 1996).

부산의 주거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부산을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주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부산 시내 또는 인근에 있는 개발가중지의 확보 및 입지여건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개발을 통해 타지역에 비해 낮은 주택보급율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 1996). 둘째, 소득계층, 연령층에 따른 다양한 주택수요와 일자리연 등을 고려하여 계층별 주거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주택공급방안과 더불어 향후 21세기에 요구되는 주거환경의 질과 주택수요가구의 라이프 사이클 및 소득수준 향상 등을 고려한 주택의 질적수준 제고 및 주택유형의 다양화 육구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도시의 고유한 잠재력과 다양성이 조화된 지역실정에 맞는 최저주거기준, 주거환경수준, 주택규모 등의 주택개발방안과 도시개발정책의 연계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산의 환경보호수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비록 부산의 환경수준이 서울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일률적인 환경기준과 환경질의 개선·유지를 위한 국가환경정책의 결과 부산의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부산광역시, 1997). 따라서 부산의 환경정책은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의 개선과 유지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둘째, 미래세대와 공유하기 위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셋째, 자원순환형의 생태도시를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확대 제공하고 주민의 환경개선사업 지원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기반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원화되어 있

는 환경행정부의 통합관리를 통해 환경관리 행정조직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8) 시민의 삶의 질 제고방안

부산 시민의 삶의 질 수준이 전국 3위였으나 서울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부산은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와 공동안전 관리체계에서는 서울보다 각각 20.1%와 8%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브건위생환경 시설에서 서울의 67.4%, 생활편의시설에서 서울의 76.5%, 교양·오락·문화·체육시설에서 서울의 64%, 사회복지시설에서 서울의 75.1%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역관계상 사회복지분야와 문화·예술분야에 한정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산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평생복지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첫째, 지역복지선도확대, 복지자원봉사활동지원, 복지전문인력확보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며, 둘째,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브건·복지·의료서비스를 확장해 할 것이고, 셋째, 장애인 재활환경 및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으로 장애인 복지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 브호 및 활동지원, 여성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해 가정복원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다섯째,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고용촉진 혼란과 자금용자 등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선진국형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부산발전연구원, 1996).

다음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세계속의 부산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첫째, 문화시설의 선진화와 질증화를 통해 부산이 문화불도자리는 오경을 벗고 21세기 문화정부시대를 선도할 지역문화를 창달해 나가야 할 것이며, 둘째,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문화예술 기금조성 및 재단설립을 통해 고급문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활동에도 지원정책을 제도화해 나가며, 아마추어 예술인과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인프라의 인적요소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오해원·윤재철, 1997). 셋째, 부산의 지역별 문화공간의 확장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넷째, 전통 문화의 계승과 보존 및 각종 퍼포먼스 활동을 전립하여 부산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화 예술 행사의 체계화 및 문화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VI. 결 론

해방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IMF경제위기를 맞아 국가적 차원의 개혁과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모든 지방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내 부자기차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수준 향상에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 대상인 부산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역경쟁력 수준은 전국의 5위에 불과하여, 지역경쟁력의 원천인 지역의 경제력, 지방의 세계화수준, 지역의 금융환경, 지역의 인적자본, 지역의 기술수준,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수준, 주민 삶의 질 등 8개 부문중 세계화수준, 인적자본수준, 주민 삶의 질 수준 (모두 전국 3위)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는 전국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만아니라 국내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유익하지 못하여 부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본 연구에서 논의한 각 부문별 지역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존의 부산 발전계획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21세기에 경쟁력이 있는 부산발전에 필요한 보다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앞으로 본 연구의 개선방향으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부산 지역경쟁력의 동태적 변화과정을 파악함으로써 부산 미래의 경쟁력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보다 미래 지향적인 부산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21세기 지구촌시대에 국제적 수준의 도시를 꿈꾸는 부산의 미래 경쟁력제고 방안을 논의하면서 자료수집의 제약으로 인해 단순히 국내 도시간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과 사회통합과 같은 정성적인 변수에 대한 분석의 미흡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분야별 경쟁력제고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와 정책실행을 위한 지역내 사회적 합의도출에 관한 논의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 강인재, “지방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지방자치*, 1997.10: 72-76.
- 고종환, “부산지역 산업발전전략과 지역특화기술개발”, *지역포럼: 『과학기술기초의 지역발전전략』*, 부산발전연구원, 1995. 5. 10.
- 김병섭,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할 제조경”, *지방자치*, 1997.10: 32-35.
- 김인환,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정보화전략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제8권 제3호 (통권 16호), 1996.9: 185-211.
- 과학기술처, (1995). 「부산광역의 지역 특화 R&D 기획조사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국토개발연구원, (1997). 「지방대도시 경쟁력 강화방안」.
- 대한상공회의소, (199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와 정착방향」.
- 부산광역시, (1996.2). 「부산주택정책 기본계획」.
- 부산광역시, (1997). 「SMART 부산21종합발전계획」.
- 부산발전연구원, (1996). 「부산발전 그랜드디자인」.
- 삼성경제연구원, (1997). 「세계도시 경쟁력 비교」.
- 이계식 · 둔형표, (1995). 「정부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한국개발연구원*.
- 이재원, “지방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예산계획”, *지방자치*, 1997.10: 102-107.
- 이종열,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 도입결로”, *지방자치*, 1997.10: 50-54.
- 일정혁 · 장영재, “지역우수도시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노동경제* 20(1), 1997: 91-115.
- 일정혁 · 최병호, (1996). 「지방화시대의 지역산업정책」, *비봉출판사*.
- 으혜원 · 윤태민, “지역문화예술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 1997.10: 91-97.
- 정진호 · 오연천 · 김익식 · 한표한 · 꽈채기 · 조동호, (1995),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형 지방경영』, 한국경제연구원.
- 조동성, (1994). 「2000년대 첨단기술산업의 비전과 발전과제」, 산업연구원.
- 통계청, (1997). 「지역통계연보」.
- 충주체, (1997). 「新정부혁신론」, 동명사.
- 허종욱 · 유승훈 · 이현수 · 이재득 · 고종환 · 문성혁, (1998). 「부산의 산업경쟁력 분석과 발전전략」, mimeo.
- 한국경제연구원, (1995).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형 지방경영」.
- 한국농률협회, (1997). 「한국의 도시경쟁력평가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1996).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변화」.
- Dong-Sung Cho, (1995). *From National Competitiveness to Bloc and Global Competitiveness*, The Institute of Industrial Policy Studies.
- Maasoumi, E., (1986). “The Measurement and Decomposition of Multidimensional Inequality,” *Econometrica*.
- Maasoumi, E. and Jin-Ho Jeong, (1985). “The Trend and Measurement of World Inequality over Extended Periods of Accounting,” *Economics Letters*, 19,
- Marshall, A. W. and I. Olkin, (1979). *Inequalities: Theory of Majorization and*

- Its Applic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Osborne, D. and T. Gaebler. (1993).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Penguin Books.
- Porter, M..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 Theil, H.. (1976). *Economics and Information Theory*,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高鍾煥 : 독일 Frankfurt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논문: Ökonomische Analyse von Energie- und Volkswirtschaft auf der Basis allgemeiner Gleichgewichtsmodelle, 1992)를 취득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국제경제실장, 지역경제실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또한 현재 독일의 Frankfurt대학교와 Giessen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경제, 국제경제, 유럽경제, 경제통합, 경기동향분석, 산업연관분석, CGE Modeling 등이며, 저서로는 『부산지역 경기동향지수(DI)의 개발 및 분석』(공저, 1994), 『부산지역 경기종합지수(CI)의 개발 및 경기예측』(공저, 1995), 『부산지역 산업연관모형』(공저, 1996) 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Sektorale und gesamtwirtschaftliche Effekte einer Reduzierung des Chemieeinsatzes und der jüngsten EG-Agrarreformen" (공동, "Landwirtschaft und Chemie", 1993), "Chemical Use Restriction in German Agriculture: Simulation Results of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공동, Universität Frankfurt, 1994), "EU Trade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유럽연구』, 1995 겨울호), "WTO체제하에서의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통상정책의 효과분석" (『경제학논집』(한국동남경제학회 논문집), 5(1), 1996), "Econo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between Asia and Europe: An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경상논총』(한국경상학회), 16, 1997), "EU 여성정책의 법적·제도적 발전과정과 EU경제" (공동, 『국제지역연구』(국제지역학회), 1(1), 1997), Optimierung und Bewertung der Landnutzung in peripheren Regionen - Ein numerisches Beispiel (공동, Agrarbusiness- Forschung Nr. 12, Institut für Agrarbusiness, Leipzig, 1999), Kosten-Nutzen-Analyse Pflanzenschutz der EU (공동, Universität Gießen, 1999) 등이 있다.